

# 문재인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할 것”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로 ▲자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지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 이사회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

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이어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금산분리와

장비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다만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 전략을 듣고 있다.

## 안전관리 업무, 국토부로 일원화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따로 맡고 있던 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부가 따로 관리했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률 제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대형과 중형시설 뿐 아니라 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이 노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에 내구성과 사용성 등의 항목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했지만 소규모 시설물을 3종으로 신설한다. 재난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 등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중앙 행정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3종 시설물로 지정

## ‘시설물 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할 수 있다.

관리주체에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기초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이나 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불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면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고 이와 관련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나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성능평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뉴스1

## 4차산업혁명 관련 유망 직종은

정부, 로봇지능개발 등 NCS 50개 신규 개발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를 고려해 로봇지능개발, 소형무인기정비,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등과 관련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50개를 새로 개발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50개를 새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NCS 신규 개발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기술, 직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미래유망분야와 관련된 NCS가 26개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고기능 무인기(드론) 분야에서는 소형무인기운용·조종, 소형무인기 비행체개발, 소형 무인기정비가 포함됐고, 지능형로봇 분야에선 로봇지능개발, 로봇 유지보수가 NCS에 추가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대대적 산업구조 및 일자리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인력양성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신규개발 NCS는 IoT, 소형 무인기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템설계·검증 등이 NCS에 새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개발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인력 양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유망 분야 NCS는 교육·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관리 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847개의 NCS를 확정·고시했으며 이번에 신규 개발한 50개가 고시되면 NCS는 총 897개로 늘어난다. 신규 개발 NCS는 국민 의견수렴과 최종 검증을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예보, 인사·조직 개편... 부실위험 대응

보험리스크관리실 신설, 연구분석부·국제협력팀 확대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사·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리스크관리 및 연구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조사 분야를 축소할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우선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조직과 인력을 31명 줄였다. 대신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연구 인력을 31명 늘렸다.

조직 내에는 보험리스크관리실을 신설했다. 저금리 기조, 미국의 금리 인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연구분석부와 국제협력팀은 각각 예금보험연구센터와 국제협력실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분석과 해외 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자산 관리·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에는 캄보디아에 프놈펜 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해외관리자산 6377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4862억원이 캄보디아에 있다.

예보는 정부 지침을 반영해 순환보직제도 보완과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등을 완료했다. 2~3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특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 31개를 선정했고, 해당 직무에 36명의 ‘전문직위 근무자’를 배치했다.

전문직위 근무자는 한 직무에서 5년의 장기 근무를 하게 된다. /뉴스1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